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342번지 조원빌딩 306호 전화/ 795-5918 팩스/ 797-7412 천리안 하이텔 나유콤/ R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기자
발 신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
연 락 처 이정운(참여연대 정책연구부장. 795 - 5918)
날 짜 1996. 10. 30. (총 11 쪽, 주제발제 요약문, 발족선언문 포함)

현재의 복지예산, 삶의 질 세계화 불가능하다! 복지예산 2000년까지 GDP 5%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단체 복지예산 확보 운동 본격 시작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1.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합 등 8개 시민사회 단체는 10월 30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2. 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복지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속 공포 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을 한 현 시점에서도 '선성장 후복지'라는 개발독재하의 경제중속적인 사회복지 정책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대위는 국민생활최저선확보와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3. 공대위는 이후 활동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엽서보내기, 의정감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니터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 등을 펼치기로 하였다.

4. 1부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는 “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한국적 복지모형의 개발’, 1994년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1995년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뒤이어 국민복지기획단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 등 매년 사회복지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복지비의 지출 실태는 소극적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예산의 개혁과제로 “첫째, 구체적 예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취되어야 하며, 둘째, 재원확보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으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복지예산 결정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사회복지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복지예산의 확대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상황을 볼 때 필수적이며, 최근에 복지문제를 민간에 이양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복지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하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그후 민간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6. 이날 토론회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이영환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은 이상덕(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위원장), 박병욱(경실련, 정책실장), 박주현 변호사(민변 사회복지위원장), 김홍신 의원(민주당) 등이 참여 하였다.

<참고자료>

< 주제발제 요약>

사회복지예산의 현실과 개혁의 과제

-199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1. 1997년도 복지예산안의 특징

국회에 제출할 1997년도 정부예산의 최종안이 1996년 9월말경 확정되었다. 최종안에 따르면 199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7조 7,80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하여 71조 6,020억원으로서 각기 전년도 예산안 대비 12.8%, 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의 특별회계들을 합하면(중복계산 제외) 총 98조 1,375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전년도의 13%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경향신문, 1996.9.25). 따라서 1997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내세운 건축의 명분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우회하는 사실상의 팽창예산으로 귀결되었다.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¹⁾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19.9%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1.9%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국방비 12% 증액'이라는 돌발변수에 따른 재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후 당정협의과정에서 19.9% 증액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그러나 특별회계(재특, 농특세, 국유재산특별회계)를 합하면 18.3%의 증가율로 약간 낮아진다(<표 1> 참조).

1997년도 예산결정과정의 특징은 정치적 요인의 강력한 영향력과 정책과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1997년도 복지예산 확충을 좌절시킨 '국방비 12% 증액'이라는 돌발변수의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결여된 채, 그 동안의 모든 계획과 구상들을 한번에 뒤엎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이 아직도 비합리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예산의 범주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정부예산의 기능적 분류상의 사회보장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보다는 크고 사회개발예산보다는 작은 범주로서 의료보호와 보험, 보훈, 근로자복지, 국민연금 및 기타 사회복지로 구성된다.

<표 1>

1997년도 보건복지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억원)

구 분	96년 예산	97년 요구액	97년 조정안	증 감(%)
<기본적 경비>	1,240		1,328	7.1
<사업비>	22,468		27,087	20.6
사회분야	7,471	12,775	9,366	25.4
생활보호	3,606	5,108	4,353	20.7
복지서비스	3,698	6,865	4,809	30.1
국민연금	167	802	204	22.1
보건의료	2,068	5,004	2,241	8.3
보건	1,102	1,879	988	-10.3
의정	581	1,025	653	12.3
식품, 약품	83	136	37	-56.0
안전본부, 지방청	39	1,125	152	285.7
보건의료기술	262	839	411	56.7
의료보장	12,929	19,133	15,481	19.7
의료보험	9,500	13,136	10,704	12.7
의료보호	3,429	5,997	4,777	39.3
계 (일반회계)	23,707	36,912	28,415	19.9
총계(특별회계포함)	27,444		32,825	18.3

자료: 97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96.9.24)

2. 정부차원의 복지개혁 논의

현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거의 매년 사회복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1년에 작성했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였고, 이후 21세기 위원회(1994)와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의 개혁안등을 거쳐 1995년에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구상의 주요 내용은 거시적 목표, 구체적 목표 및 예산계획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등장하였다.

둘째, 구체적 목표의 측면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에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1993.7: 93-97; 국민복지기획단, 1995.12).

셋째, 예산계획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에산을 매년 20% 정도 증액하여 국제적 기대치에 도달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특별한 예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는 일반회계 중의 사회복지비를 6년간 매년 20%씩 증액하고 재특과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완하여, 1994년에 GNP의 0.8%였던 사회보장비를 2000년에는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서 목표치 추산의 근거인 60개국 평균기대치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세계 11위)과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현정부의 복지개혁 구상은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평균 재정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복지에산 증액을 계획한 소극적(reluctant) 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혁논의와는 달리 현정부의 복지비 지출 실태는 이러한 소극적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최근 추세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GNP 1%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에는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복지비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복지비 지출은 정체 내지는 완만한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축소 경향은 1993년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199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복지에산의 증가율이 평균적인 재정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6년에 와서야 복지에산증가율(18%)이 일반회계 증가율(16%)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로 책정되었을 뿐이다(1996년도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GNP 대비 6.0%, 일반회계 대비 0.9%).

<표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사회보장 예산	일반회계 예산	G N P	사회보장/ 일반회계	사회보장/ G N P
1995	2,921,907	50,141,100	333,529,000	5.8	0.86
94	2,613,623	43,250,000	289,482,300	6.0	0.90
93	2,414,830	38,050,000	266,540,000	6.4	0.90
92	2,148,901	33,501,729	235,880,000	6.4	0.91
91	1,995,858	31,382,261	206,016,500	6.4	0.97
90	1,498,834	27,455,733	171,488,100	5.5	0.87
89	1,142,708	22,046,824	127,400,000	5.2	0.90
88	820,227	18,429,079	123,579,000	4.5	0.66
87	580,300	16,059,629	105,629,800	3.6	0.55
86	456,428	13,800,532	90,543,900	3.3	0.50
85	397,388	12,532,362	78,088,400	3.2	0.51

* 사회보장예산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 + 보훈 + 근로자복지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1995)

3. 민간 차원의 개혁논의

민간차원의 복지예산 확충운동이 전개된 것은 1991년 가을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계의 항의집회가 발단이 되었으며, 이듬해 사회복지관련 8개 단체들이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의 성명("복지개혁을 촉구한다")과 1996년 봄의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협의회 및 국민복지연합의 성명 등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요구는 'GDP 대비 5%의 복지예산'에 대한 요구로 정식화되었다(이영환 외, 199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발전수준과는 걸맞지 않는 지극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사회복지학계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GDP의 1% 남짓에 불과한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을 2000년 경 GDP 대비 5%로 확충하자는 민간운동 차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복지개혁 논의의 전제로서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기능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 1) 사회복지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과 예방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2)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사회적 균열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 3) 사회복지의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의 최고의 경쟁무기라 할 수 있는 인간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의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복지가 낙후될 경우, 주택·보건·교육·노후보장 등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부담이 결국 임금인상과 생산비용의 폭등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여 경제의 취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복지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충족되어야 할 시급한 복지욕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욕구들은 현재의 복지제도들을 '적용의 보편성'과 '위험의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파악될 수 있다.

<표 3> 욕구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예)

- 제도의 보편성:
 - 사회보험의 제한성: 연금(도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제외), 산재(5인 미만 업체 제외), 고용보험(30인 미만 업체, 부분적으로 10인 미만 업체 제외),
 - 생활보호사업(공적부조): 선정기준의 엄격성
 - 노령수당, 장애인 수당: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는 실정.
- 위험의 포괄성: 제도의 완비성 문제
 - 예: 아동수당, 무각출 노령연금, 주택급여, 농어민 재해보험 등 결여
- 급여의 충분성: 생활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 연금 급여 수준 등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셋째,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복지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94년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방위비는 17.2%, 경제사업비는 26.6%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한 반면, 복지비는 총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비복지적 재정구조를 복지지향적으로 개혁하여 정부기능의 질적 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30% - 65% 정도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형성기를 지나면서 복지비 지출이 GDP의 5 - 10%를 상회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GDP 5%의 복지예산 확충은 복지국가를 향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5%의 복지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25% 안팎에 해당된다.

<표 4>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입과 지출의 대GDP 비중

	1993년	1994년	비 고
사회보장 총재원	5.5%	5.7%	민간기여금 포함
사회보장 총지출	3.6%	3.7%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	1.2%	1.21%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1.07%	1.09%	공무원 보험료부담 제외
일반정부(지방포함)		1.58%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1.42%	공무원 보험료부담 제외

* 사회보장 범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훈사업과 근로자복지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일반정부 복지비지출 대비 1992년 (23.4%), 1993년(25.6%), 1994년 (23.4%)였다 (국민복지기획단, 1996: 184)

자료: 노인철 외(1996)에서 재구성

<표 5> GDP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 (OECD)

(단위: %)

	1980	1992	1993
호주	11.68	16.38	
오스트리아	22.34	24.71	25.78
벨기에	25.63	27.01	
캐나다	13.29	19.77	19.75
덴마크	27.63	29.94	30.96
핀란드	18.87	34.78	35.39
프랑스	23.46	27.29	28.73
독일		27.26	28.27
서독	24.98	23.68	24.67
그리스	10.88	16.77	17.24
아일랜드	19.35	20.39	20.06
이탈리아	18.23	24.68	25.00
일본	11.09	12.44	
룩셈부르크	27.40	29.47	30.96
멕시코		3.83	
네덜란드	28.71	29.79	30.20
뉴질랜드	18.20	22.51	
노르웨이	18.86	29.48	29.32
포르투갈	11.65	15.60	16.37
스페인	16.49	21.41	22.52
스웨덴	30.42	37.07	38.03
스위스		20.63	
터키	4.40	7.16	7.11
영국	18.32	22.84	23.42
미국	12.44	15.55	15.64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표 6> 유럽연합 12개국 정부의 평균 복지비 지출

(단위: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정부지출/GDP	6.78	7.54	7.03	7.69	8.15	8.61

* 정부지출은 사회보호비용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와 비슷. 주택 포함) 을 의미하며, 정부가 고용주로서 기여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제외된 수치이다.

자료: EU(유럽연합), Eurostat 1993 에서 재구성.

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1993년 현재 대부분 GDP의 30% 안팎에 달하는 복지비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1980년경에도 이미 평균 20% 안팎의 복지비 지출수준에 도달하였었다. 여기에서 사회지출비는 노령 및 장애급여, 산재(직업병), 상병급여,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유족급여, 가족급여와 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급여, 주택급여, 보건, 기타로 구성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구조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통계에서 총사회보장 재원 중 정부가 부담하는 몫만을 별도로 추계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이 표는 유럽연합 12개국 의 평균 복지비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GDP 대비 평균 8% 이상이어서 GDP 대비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서구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이었을 당시와 비교하거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발전수준과는 걸맞지 않는 지극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사회복지관계자들이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넷째, 최근 교육예산을 GNP 대비 5%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민을 위한 복지예산 또한 교육예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4. 복지예산 개혁의 과제

첫째, 구체적 예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측의 개혁구상들은 대체로 2000년대에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매년 20%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산출근거와 목표의 소극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학계나 실무계 및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2000년경에 정부 차원의 복지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매년 40%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복지욕구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재원확보 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조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탈루세원의 발굴과 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의 확대 및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지출의 확대를 위해서 세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 요청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조세체계를 개혁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정지출 구조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나치게 비대한 방위비와 경제사업비를 줄여서 복지지향적 재정구조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복지급여의 낭비와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 이외에 주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와 같은 민간자원 동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참여는 공공복지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적인 수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출을 축소할 목적을 갖는 지방화 정책도,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가 책임질 복지몫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에산 결정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이다. 우리나라의 예산결정과정은 한편으로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요인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비합리성이고 예측불가능하게 전개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결국 국민적 신뢰에 바탕한 복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구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발족 선언문

우리나라 복지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속 공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복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민정부라는 현 정부들이 '삶의 질 세계화'를 자주 강조해 왔으며, 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한국적 복지모형을 만들고,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으나 오늘의 현실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있다.

OECD가입을 한 현시점에도 '선성장 후복지'라는 개발독재하의 경제중속적인 사회복지 정책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부산물로 우리사회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계층갈등의 심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안전의 위협과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사회적 약자보호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도 하지 않는 '삶의 질 세계화'나 '사회통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세계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및 예산의 확대가 비생산적인 비용지불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병리 현상으로 인한 비용 지불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주는 요건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선언하면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6년 10월 30일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